

2005. 8. .

- 第100回 忠州市議會(臨時會) 市政質問 -

答 辯 要 旨 書

副 市 長

시 정 질 문 목 록

【부시장】

의원명	질문요지	비고
계	2명 / 4건	
① 김대식 의원	<p>1. 충주시의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인 “충주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와 현황은 ? · 시대적·사회적·국가적으로 화두(話頭)를 이루고 있는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의지는 유일하게 충주시만 전무인 것 같은데 이와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 ·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유형과 제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p>2.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중 4번째로 충주시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지수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한 청렴도의 척도는 유형별로 무엇이며, 특히 충주시에 대한 권고 사항은 포괄적으로 무엇이며 그에대한 개선 여부는 ? · 시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며 그 활용도와 효과는 무엇인가? ·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및 시민 등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최선의 제도적인 네트워크 설치와 기구는 무엇인가 ? 	<p>지적민원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과</p>
② 김용성 의원	<p>1. 밭기반 정비사업을 사과집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체조성할 수 없는가? 투자할 용의는?</p> <p>2. 사과특구지역에 친환경농법을 사과연구소에서 일괄하여 연구지도할 용의는 ?</p>	<p>농정과 농업기술센터</p>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대 식	답변공무원	부 시 장
<p>□ 질문사항</p> <p>충주시의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충주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와 현황은? •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충주시만 의지가 전무인 거 같은데 이와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나 계획은 ? •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유형과 제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p>□ 답변내용</p> <p>○ 충주사랑 주소갖기운동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05. 6. 1 ~ 6. 28 (1개월간) ※ 말소자 재등록은 2005. 2. 21일부터 추진 • 추진대상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및 말소자 • 추진기관 : 읍·면·동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일제 전입신고기간」 운영 -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추진실적 : 46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전입자 전입신고 : 216명 (대학생 11, 공공기관 57, 기업체 38, 무단전입자 110) ※ 충주시 공무원 : 29명 - 말소자 재등록 : 249명 (신고말소 52, 직권말소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05. 2. 21~4. 8) : 178명 • 2차('05. 4. 8~6. 28) : 71명 			

질문의원	김대식	답변공무원	부시장
<p>○ 출산장려정책의 정책적인 유형과 대안</p> <p><정부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정부에서는 범국가적 정책 의제로 설정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였음. 또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2005. 5월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p><충주시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기초예방접종, 성장발달스크리닝, 건강검진, 이유식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등 모자건강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05년 현재 국고 보조금으로 “결혼예비학교”,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자질 향상과 인구늘리기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우리 실정에 맞춰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범시민 분위기조성 및 출산장려의 필요성과 우리시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대 식	답변공무원	부 시 장
<div>□ 질문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의 유형별 척도와 충주시에 대한 포괄적 권고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여부는 ? ○ 시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제도장치는 무엇이며 그 활용도와 효과는 ? ○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 등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최선의 네트워크 설치와 기구는 무엇인가 ? <div>□ 답변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4년도 충주시 청렴도 측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표본수 : 175 표본(처리민원 : 1,722 건) • 측정업무 : 공사계약관리,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환경분야 지도단속 ○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 10점 만점에 8.60점(2003년도 8.45) (충북 8.69보다는 낮고 전국시청평균 8.34보다 높음) • 영역별 <div> <div>체감청렴도 : 부패경험, 부패인식</div> <div>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모두 주택건축인허가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금품 제공율 : 1.14 % (전국시청 평균 1.78%보다 낮고, 충북평균 0.95%보다 높음) ○ 개선대책 : 2005년도 청렴도 측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 			

질문의원	김대식	답변공무원	부시장
<p>2. 부패방지 제도장치 및 활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클린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월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품을 받거나 발견한 공무원은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신고자에게는 연말 표창등 인사우대 혜택 부여추진 ○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2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부조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 주민신고창구 운영 ○ 충주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제정 공포(200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 시 조례로 제정 운영 <p><운영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클린센터에 1건(현금500천원, 들깨 5kg)이 신고 되어 충주시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제21조3항에 의거 시세입 조치하였고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 다양한 부패방지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5. 26 / 지역개발과 토목7급 박성규 <p>3.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최선의 네트워크설치와 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7. 20.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위원회와 기초단체 및 광약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조로 업무체제를 일원화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부조리 신고접수를 전담하고 있음. 			